

## 차기 정부에 바란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drlee75@naver.com

온 국민이 우울한 마음으로 지켜본 대로 지난 몇 달간 국가적 분란의 시기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수감이라는 참담한 모습까지 다시 보게 되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됨에 따라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책을 준비하고 공약을 마련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지난해부터 의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미래정책 기획단을 구성하여 25개 과제를 정리하였고, 이 중 국민과 공감할 수 있고 국가와 의료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5대 핵심정책을 선정하여 대선참여운동본부를 통한 정책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보건의료 개혁, 새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보건의료정책이란 모든 국민이 남녀노소 빈부 구별 없이 건강권을 보호받고 적절한 필수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제도를 설계, 유지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모든 국가 정책 중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보들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공약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어떤 정당이 정권을 담당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의료계가 바라는 바대로 정책을 100% 실현하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대한

민국 의료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안목을 갖춘 대통령 및 장관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위한 개혁을 시작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역대 정부와 정치권은 진료원가에도 못 미치는 기형적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외면하였으며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할 공공의료부문에 대한 투자마저 게을리 하였다. 이로 인해 보험수가에 영향을 받는 필수진료는 위축되고 공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실손보험 등 사보험의 팽창으로 국민 총 의료비는 급증하였으며 공공의료는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여 이제는 그 존재마저 미미하다. 이는 적정부담에 대한 국민 설득을 외면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투자를 방기한 까닭이다. 새 정부는 이를 답습하지 말고 개혁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

### 가장 심각한 것은 건강보험과 공공의료이다.

급속한 노령화는 만성질환 증가와 이에 따른 합병증의 증가로 의료수요와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를 초래한다. 현재와 같은 저부담 체계에서 과소비적이고 기형적인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제도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공의료의 미비는 국민보건증진과 질병예방이라는 본연

의 역할 부재로 이환률 증가로 이어지고 국가적 재난 시 임무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므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공공의료 부문의 개혁을 보건의료 개혁과제 중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부담 고효율 보험제도가 유지되어 온 이면에는 낮은 원가보전률과 저수가 체제에서 진료총량 늘리기로 버티며 적자분을 비보험 진료와 의료외 수익으로 충당한 의료기관의 속사정이 있었으나 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지금까지는 공급자에 대한 규제와 수가통제로 보험제도 유지가 가능하였지만 만성질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지속된다면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나 국가 재정지원 확대 등의 대책이 없이는 보험재정 적자를 피할 수 없고 결국 건강보험제도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시급한 이유이다.

## 국민건강보험, 공공의료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새 정부에 바라는 의료정책 중 우선순위 두 가지만 정한다면 저부담 저수가의 기형적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적정부담 적정진료 체제로 정비하고, 공공의료를 국민보건향상과 질병예방 등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차기정부는 건강보험 적정부담을 위한 대 국민 설득과 국고보조 증액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공공의료 등 보건의료 시스템이 제자리를 잡도록 공공의료 부문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물론 이런 개혁과제는 쉽게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보험료 인상이나 공공의료부문 투자증대는

당장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고 정부부처 간 이견 등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혁이 더 이상 늦추어지면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곧 파국에 직면 할 것이며 현재와 같이 열악한 방역체계 등 공공의료 시스템으로는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면 여전히 우왕좌왕하며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것이다. 새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개혁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길 바란다.

## 폭탄 돌리기는 이제 끝내야한다.

질병을 치료의 개념에서 예방의 개념으로, 환자의 상태를 약물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생활습관 개선 등으로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폭발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즉 공급자에게 적정진료 환경을 보장하고 질병의 치료뿐 아니라 상담과 관리가 따르는 질환 예방적 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서 전체 의료수요가 조정되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질병 예방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포함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나 역대 정부는 이를 외면해 왔다.

의료수요 폭발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를 눈앞에 둔 지금 여전히 의료공급자를 규제하고 수가를 통제하여 제도를 유지하려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공공의료가 보건증진, 질병예방 등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민간의료기관과 환자유치 경쟁을 계속하는 한 한국의료의 미래는 없다. 이제 폭탄 돌리기는 멈추어야 한다. 그 폭탄 심지의 끝은 이미 뇌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차기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뜻을 모아 건강보험제도의 개선과 공공의료 개혁을 위해 우선 뇌관에 닿은 심지부터 끊고 파국을 막을 방안을 찾아 나아가길 바란다.